

<첨부>

NCKK가 선정한 5월의 (주목하는) 시선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5년 터울의 두 죽음이 울부짖는다

지난 23일 일요일 아침,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격무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코호트 격리 병원 담당자였던 간호직 공무원은 전날인 토요일 오후 8시에 지친 모습으로 퇴근한 뒤,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다. 유족에 따르면 그가 밤새 검색한 단어들은 ‘11층 아파트’, ‘뇌출혈’, ‘두통’, ‘최연소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정신과’, ‘우울증’ 이었다. 공무원 면직, 질병 휴직 등을 문의하는 글도 여러 번 살폈다. 다음 날 아침 8시경 그는 남편이 잠자던 안방에서 나와 부엌 쪽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죽은 이가 근무하는 보건소의 정규 간호직 공무원은 50여 명에 불과한데, 코로나로 기존의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 역학조사 등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업무에도 동원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병원을 맡았고, 죽기 직전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간호사의 죽음 5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 군’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NCKK가 <이달의 시선>으로 처음 주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2016년 6월의 주목하는 시선, <김 군의 가방>)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정비 계약을 맺은 은성PDS에서 일했다. 두 업체의 계약에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 김 군은 사고 당일 ‘1시간 시간제한’까지 6분여 남은 오후 5시 52분께 구의역에 도착했다. 구의역 정비 후에는 오후 6시 20분까지 을지로4가로 가 다른 수리를 해야 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군은 혼자 작업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그의 가방엔 가지런히 챙긴 작업 공구들과 컵라면 한 개와 나무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은 김 군의 생일이었다.

두 죽음 사이에 5년 간격이 있지만, 죽음의 본질은 같다.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의 부재는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 5년이 흘렀지만 ‘있어야 할 것’을 만들겠다고 이들의 약속은 구호로 그쳤고, 오늘도 곳곳에서 노동자가 죽어간다. 김 군의 생일날,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날도 5년 전처럼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죽지 않고 일하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사람이 먼저이길’

‘죽지 않고 일하기, 사람이 먼저’라는 호소가 가슴 저리다. 40년 전 전태일이 분신하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출근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그 누구는 누구인가. 내 가족이고 이웃이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다. 아니, 목숨이다. 그냥 생명이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오늘도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다. 그러나 슬한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노동현장’과 ‘의료현장’에선 무슨 일이

두 죽음을 다시 본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조건은 더 악화됐다. 과연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노동현장부터 보자. 서울시장의 사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고 전기 관련 작업을 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은 여전하다. CBS 노컷뉴스는 지하철 작업현장에서 아직도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작업자에게 호신용 물품으로 호루라기, 고춧가루 물총 등을 제공했던 서울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안전한 작업 환경에 필요한 138명 가량의 추가인력 배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5년 전 김 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 정치가, 기업인, 단체의 호들갑을 기억한다. 모두 안전장치를 약속했고, 책임진다 했다. 그때뿐이었다. 달라지지 않았다. 목숨을 담보하는 노동현장은 지하철 현장만이 아니었다. 노동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김 군에서 제주 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 5월 말, 단 1주일의 기록이다. 30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두 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질식사했다. 하루 앞선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혼자 제품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뒤 방치돼 있다가 다른 공정 동료 노동자가 발견했다. 27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짜리 돌에 맞아 숨졌다. 26일에는 세종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kg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숨졌다. 24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중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23일에는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거의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어떨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확충

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해야 했다. 취약한 공공의료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지역과 2차 유행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에는 3만 6,000여 개 병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은 불과 433 병상을 가진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이었다. 3월 4일, 대구에서만 누적 4,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300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다. 3월 15일 코로나19로 사망한 75명 중 17명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사망환자의 70%는 인공호흡기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매달리면서 일반 의료공백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2월 24일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자, 간경화로 20년을 넘게 진료 받던 환자는 강제퇴원 당했다. 민간병원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이 환자는 추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차 유행 이후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14일 전국에 세 자릿수의 확진자(103명)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에서 75%까지 치솟았다. 바로 대기 환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생기면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 대기자가 생겼다. 같은 달 29일 경기도의 자택 대기 환자는 260명으로 늘어났다. 31일에는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 가용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사라졌고, 충남, 경남에 겨우 1개만 남았을 뿐이었다. 취약계층의 고통도 심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들은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받았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이었다. 지방의료원에서 쫓겨난 취약계층 환자들은 민간병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으로 향해야 했다.

공공의료 시설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과 운영의 문제도 심각했다. 보건 의료노조는 틈날 때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호사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3.7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부족한 인력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생기면 일은 남은 간호사에 쏠리고,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간호사들이 다시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56) 위원장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코로나19 환자 열 명 중 여덟 명을 전체 병상의 10%가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했다.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했다. 병원 간호사들이 소진됐다. 새벽 5시에 나

와 오후 4시까지 밥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일했다.”

참다못한 보건의료노조는 세계 보건의 날(4.7)을 하루 앞둔 6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겪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병원은 국가 재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기계 부품 마냥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사용해야 하나.”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코로나19 병동 간호사(29)

“방호복을 입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8시간 동안 근무해야 했다. 지난겨울엔 실내에서 근무했어도 음압기 탓에 영하 12도에서 환자를 상대해야 했다.”

- 지역 대학병원 선제격리실 응급환자 담당 간호사(33)

“수많은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을 하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방호복, 고글, 장갑은 제공했지만 산소통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역 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3~4일간 이어진다.”

- 선별진료소 방역업무 담당 서울 종합병원 미화 노동자(54)

“어르신들 검사 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엔 방호복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닐 가운과 위생장갑, 위생 앞치마를 대신 착용해야 했다. 격리 2주 동안 24시간 요양원 안에 갇혀 설 틈 하나 없이 일했지만 쉬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 코호트 격리 요양원 요양보호사(67)

애써 외면하지만,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전문가의 뼈아픈 지적이다. “K 방역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K 공공의료는 실패했다.” 간호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의 산물인 것이다.

사적 복수극 드라마 <모범택시>가 상징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다. 의료종사자, 기저 질환자,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노동자, 가난한 이, 노인이 그들이었다. 우리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주목한 이유는 두 현장이 코로나 시대 삶의 현장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이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한다. 5년 터울의 두 죽음은 공공영역의 직무유기가 낳은 전형적인 사회현상인 것이다. 구멍 난 공공영역은 의료와 노동만이 아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노동현장, 코로나에도 개선되지 않는 공공의료 현장이 그 증거다. NCK가 이달에 주목하는 5년 터울의 두 죽음이 증언한다.

문제지점은 바로 여기다. 공공의 기능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개인은 공공의 순기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불신사회로 진입한다. 불신사회는 다시, 각자가 제 삶을 도모하는 각자도생 사회로 진전한다.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인가, 세상을 지탱하는 공적 기능과 신뢰가 무너져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모습일까, 법 영역을 통해 보자. 법 영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와 ‘성 접대 사건’을 비롯한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법원은 판결개입과 사법 농단으로 신뢰를 잃었다. 공익성을 상실한 법 영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선택의 결과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가 잘 보여준다.

<모범택시>는 “정의를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 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재는 ‘심신미약 감형’부터 ‘현대판 노예’까지 현실을 판박이 했다.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희대의 성범죄 사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노동 착취 등 인권유린을 행한 ‘젓갈 공장 노예 사건’, ‘학교폭력’ 등은 우리 사회의 응어리인 바로 그 사건들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드라마를 보며, 시청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하고, 가해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범죄자를 벌주지 못하는 법 권력을 다시 불신한다. 분노와 불신이 큰 만큼 복수는 통쾌하다. 이제훈이 악당들을 맨손으로 일망타진하는, 때로는 과도하기까지 한 폭력장면에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한다. 댓글이다. “핵 사이다 드라마”, “사이다를 드럼통째 들이킨 기분”, “스트레스가 한 방에 짜악 날라 감”, “리얼 통쾌”...

그동안 법은 강자와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했다. 아픈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감싸지도 대변하지도 않았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슬프게, 아프게 그려낸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이고, 국민은 그 드라마로 현실을 위안 받을 것이다. 오늘 NCK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다.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

현장1

지난해 8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 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철회하라 요구했다. 이때 ‘의사는 공

공재인가' 논쟁이 벌어졌다. 한 여당 의원이 파업을 비판하며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 인력은 공공인력'이라 발언하면서였다. 코로나나 메르스같이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건 의료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위급시라 해도, 국가가 의사를 차출한다는 내용에 반발이 거셌다. 온라인에는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고 게시하고, "서울 송파구 사는 김 공공, 경기도 동탄 사는 최 공공재" 식 푸념들이 쏟아졌다. 공공재라면, 영국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을 국가가 제공하라 주장했다. 의료진이 파업하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급성 심정지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고, 부산에서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 올 2월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의협은 다시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현장 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이라 요구했다. 정부가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호사 개업에 필수인 실무연수 인원을 지난해 78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변협 외 실무연수 자리가 1,000명 정도이니, 연수를 받지 못한 합격자 500명이 당장 갈 곳이 없게 된다. '실력 행사'로 실무연수를 못 받으면, 애초 주장대로 새 변호사 500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자신들이 제시한 수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의도였다. 변호사 인력 증원에 대한 반발도 심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때 87%에서 10회인 올해엔 54%까지 낮아졌다. 이제 기득권이 된 선배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장 포화",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지만, 막 시작하려는 후배들은 '사다리 건너차기'라 울분을 토한다. 법무부의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41.28명, 영국 32.32명, 독일 20.11명, 프랑스 10.83명, 한국 5.39명, 일본 3.38명이다. (2020년 기준)

현장 3

사망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목숨을 잃은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계약직 노동자다. 힘세고 가진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여전히 작업현장은 열악하고, 안전 장비는 허술하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62명으로 전년도보다 42명 늘었다.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노동자 사망사고의 86%가 50인 이하 작업장에서 일어나고, 죽는 노동자 90%가 하청 노동자인데도 법은 현실을, 아니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했다. 사람이 죽은 사고 현장에서는, 어떤 점검이나 보완도 없이 버젓이 다시 작업이 이루어진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말한다. "일하다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 한 명당 벌금이 450만 원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됐다.”

현장 4

지난달 9일, 한 여당 의원이 한강 사망 의대생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이선호씨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하며 언론에 질문을 던졌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써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겨우 몇 언론에서 한두 번 다뤘을 뿐이다. (중략) 왜 우리 언론은 이선호 군 죽음에 대해서는 이리도 차갑고 무관심한 것일까. 이제 일하다 죽는 일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뉴스 거리가 안 되는 것인가.” 언론 스스로도 두 사건 보도를 비판했다. “의대생 죽음도 안타깝지만 노동자 청년의 억울한 죽음도 의대생 사건만큼 10분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이데일리> “한강 의대생도, 평택항 노동자도 청년이다”) “9일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서 ‘손정민’과 ‘이선호’를 키워드로 비교(8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손정민씨 키워드 검색량이 100인 데 반해 이선호씨 키워드 검색량은 2.16에 그쳤다.”(<한국경제> “한강 의대생 ‘100번’ vs 평택항 알바생 ‘2번’… 남다른 관심의 온도”) 두 기사는 오늘 세상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않는 언론의 실상을 그대로 전한다.

현장 5

코로나이익공유제,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 등 지난 연말, 연초에 여야가 쏟아내던 코로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실종됐다. 저축을 깨고, 카드 돌려막기로, 대출로 임대료와 빚을 메꾸며 생계를 이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는 소급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치는 위기의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떠넘겼다. 보선에 참패한 거대 여당은 선거 민심과 동떨어진 부동산 세금 문제를 꺼내 들었고, 대선용 재난지원금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원도 없이 청년지원책들을 공약하며 갑자기 청년 잡기에 나선 유력대선주자들의 모양새도 우습다. 야당의 세대교체 바람을 두렵게 바라보며, “나 떨고 있니?” 묻는 만평이 오늘 정치의 민낯이다. 정치는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지도,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정치현장에는 사람이 없다, 세상도 없다. 정치인들만, 선거만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공 시스템이 부재하고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섯 현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장소들이다. 의사는 생명을, 변호사는 인권과 안전을, 노동은 삶의 주체로서의 노동권을, 언론은 목소리를, 정치는 삶의 조건을 담보해 내야 한다. 그러나 보라, 지금 공공영역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지경들을. 의사집단에서 벌어진 공공재 논란을 단지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할 문제가 아니다. 뉴노멀은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과 국가 재설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노동 등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서 NCKK <주목하는 시선>은 묻는다. 의사는, 변호사는, 노동(현장)은, 언론은, 정치는 공공재인가? 이 시기에 공공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과 국가의 귀환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사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었다. 코로나는 뉴노멀과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고, 종식되더라도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충격적이다. 공공병원 신축, 증축 예산은 0원이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은 71.4%이지만, 한국은 10.2%에 불과하다. 병상 수를 늘린다지만, 10%에서 11%로 언 발에 개미 오줌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9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고, 발족을 앞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는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로 대립한다. 우리는 이미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2021년 1월의 시선,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히 의료 위기, 방역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위기로 확산한다. 부와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른바 ‘K-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산 불평등, 고용 불평등은 심화했다. 실업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폐업하는 가계가 줄을 이었다. 공공의 역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돈을 푸는 데 극히 인색했다. 한국 정부의 직접지출(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G20 평균인 8%, OECD 평균인 6%에 비하면 훨씬 적다. 독일은 직접지원 규모가 GDP의 7~8%, 대출 지원 규모는 31% 수준이고, 일본은 직접지원 11%, 대출 지원 24%, 미국은 직접지원 12% 수준이었다. 한국의 지원은 그마저도 언젠가 피지원자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대출 중심 지원에 불과하다.

다시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심화한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때 이를 감당할 곳은 국가밖에 없다. (<국가의 귀환>, 장덕진 서울대 교수) 그동안 그래 왔듯이, 지금 국가는 자신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안 된다. 국가는 위기 시대의 중심에 서라. 정치이론가 조앤 트론트가 제시한 ‘돌봄’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과 국가 재설계를 수행하라. ‘돌봄’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구 자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돌봄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보편적 돌봄’이 되어야 한다. (<돌봄 선언>, 더 케어 컬렉티브) ‘보편적 돌봄’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을 중심에 뒤편만 보이는 것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언론은 왜 필요한가, 법과 의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다, 사람의 행복이다. 의료는, 법은, 노동(현장)은, 언론은,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공공재로 거듭나라. 5년 터울의 두 죽음의 시선이 사적 복수극 <모범택시>를 향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